

# 강릉화전 설립 영향 1월 건설수주 4조 돌파

올 1월 도내 건설수주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8년도 1월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도내지역 1월 건설수주액은 모두 4조2,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조사된 492억500만원보다 무려 4조1,93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1월 기준 최고액을 기록했던 2007

총액 4조2,432억 기록 역대최고

안인발전소 1·2호기 공사 큰몫

부동산 개발·투자 세력도 여전히

년(1조510억원)보다도 3배가량 많은 액수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새로 썼다. 전국 1월 총 수주액(11조1,521억원)의 38%를 차지한다.

이러한 건설동향은 올 1월 강릉안

인화력발전소 1·2호기 토목건설공사 수주액 규모가 4조1,5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꾸준한 부동산 개발도 영향을 미쳤다. 발주자별로 신규주택, 사무실, 숙박시설 등 민간 부문 수주액은 한해 사이 293.7% 증가했다.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투자 세력의 발길이 여전히 강원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윤종현기자 jjong@

취임 1년 맞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반 구축 ‘안전+일자리’ 두 토끼 잡고 재도약”

## ‘도전과 응전’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작년 이맘때 27대 대한건설협회장에 오른 유주현 회장(사진·신한건설 대표)의 지난 1년이 꼭 그랬다. 2017년은 근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지만 샴페인을 터트리기에 처한 현실이 냉혹했다.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때 건설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SOC와 높아진 주택 보급률로 건설투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과 청년들은 건설산업을 점차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회장의 현실 진단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993년 경기도회 간사를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18·19대 경기도회장과 감사, 회원이사 등 오랜 기간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준비된 협회장’이란 평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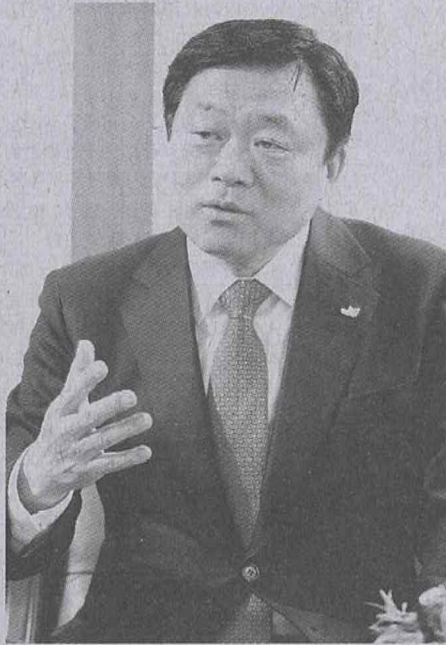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기치로 내건 지난 협회장 선거에선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외국된 건설시장 바로잡기 △새로운 건설시장 발굴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시도회장과 합심해 올해 정부 SOC 예산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국회 토론회와 합동 긴급기자회견 등 최대한 발로 뛰었습니다.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라는 건설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국회에서 1조3000억원의 SOC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역대 최대다. 유 회장은 많게는 하루에 7~8건씩 일정을 소화하며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을 만났다.

## 무등록자 직접시공 범위 줄여

무등록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를 대폭 줄여 건설업계에 약 10조원의 신규 물량을 창출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건설공사



## 국회의원·관료 등 연이어 만나 설득 올 SOC 예산 1.3조 증액 ‘큰 성과’ 직접시공 줄여 신규물량 10兆 창출

시공자 제한 범위는 단독 주택의 경우 ‘연면적 661㎡ 이하’에서 ‘연면적 200㎡ 이하’로 축소(비주거용 495㎡→200㎡)됐고,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게 바뀌었다.

우리 건설사들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도 발벗고 나섰다.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정부 해외 수주지원단으로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다.

건설산업 70돌을 맞아 ‘건설인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43차 이포카(IFAWPCA) 한국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건설산업 미래비전 선포와 건설 70년 통사 발간, 건설 문화상 제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에도 힘썼다.

“공격(제도 개선)보다 수비(불합리한 개정

안 방어)하는 일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계는 ‘물량’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신규 수주물량 확보와 함께 적정 공사비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다.

“올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건설산업이 기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만이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10% 수준 상향과 3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낙찰률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신규물량 확보·노후인프라 개선

유 회장은 신규 건설 물량 확보를 위해 지역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자원 마련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신규·노후 인프라 핵심 사업을 전수 조사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도로 지자체 연구원, 대학 등과 손잡고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 결과는 시·도별 순회 세미나를 거쳐 구체화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경영 약화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와 부동산·이사·청소업체·주변 식당 등 연관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할 여력을 줄여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4차 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형기자 kth@·사진·안윤수기자 ays77@